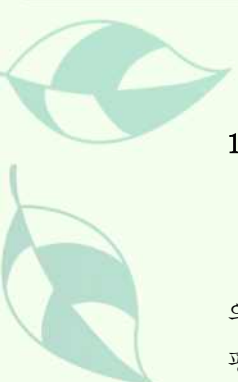


전략환경평가실무

07.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제도





1. 전략환경평가의 도입

전략환경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나, 도입된 각 나라마다 환경영향평가의 방향과 한계는 다른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최초로 도입되면서 환경영향평가는 영향저감 대책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환경영향평가는 의견을 협의하는 협의제도이지만 환경영향평가가 계획자에게 개발사업과 환경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획지원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한반도대운하와 관련된 공개적 논의들은 과학적 논쟁과 평가서의 작성과정을 통한 평가 및 검토가 없었지만, 사회적인 논의와 공개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총론을 정하려고 하는 프로세스로서 SEA의 본질적 요소와 비슷한 측면이 있었다. 반면 신도시 개발사업 등은 전형적인 불투명 의사결정의 사례로서 입지의 선정은 어떠한 근거로 하는가, 또한 부동의와 피드백 등이 없는 과정은 SEA와는 거리가 먼 절차로 수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평가제도의 비교

우리나라의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제도의 목적, 근거법, 대상사업, 평가시기, 평가주체, 절차, 평가시점 및 평가내용, 계획지원기능, 정보공개, 공중참여(주민참여와 전문가 심의), 환경부서의 역할, 승인부서의 역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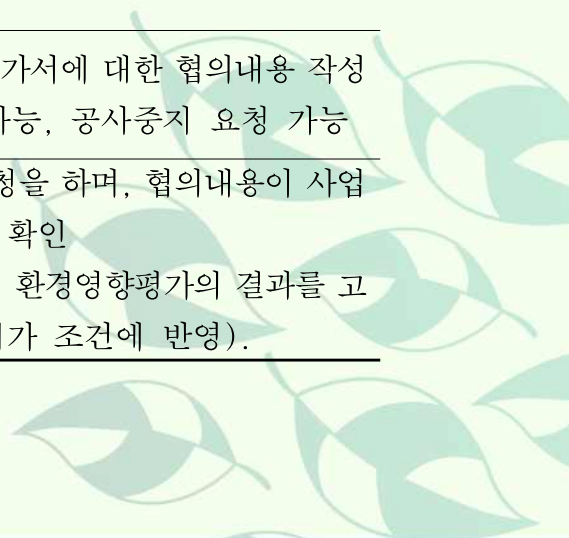
- 1) 환경영향평가제도
- 2)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 3) 국토해양부 국토계획평가
- 4)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가능성검토
- 5)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1) 환경영향평가제도

목적	○ 공장건설, 도로건설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
근거법	○ 환경영향평가법
대상사업	○ 도시개발, 도로건설,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등 17분야 76개 단위사업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평가지기	○ 사업계획의 승인(허·인가) 전,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함.
평가주체	○ 사업자(혹은 대행자)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과 협의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는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역할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스코핑, 평가서 초안 및 본안 작성(사업자가 작성, 주민 의견수렴 등) ○ 2단계 : 검토 및 협의(KEI가 전문적 검토, 환경부 등이 협의내용 작성, 사업자는 협의내용 반영하여 저감대책 마련) ○ 3단계 : 사후관리단계(공사 실시 운영단계에서 협의내용 이행, 환경영향조사)
평가지점 및 평가내용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예측 평가를 하여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마련



	<div>○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평가분야 및 항목</div> <table><tr><th>평가분야</th><th>평가항목</th></tr><tr><td>대기환경</td><td>기상, 대기질, 악취</td></tr><tr><td>수환경</td><td>수질(지하수포함), 수리·수문, 해양환경</td></tr><tr><td>토지환경</td><td>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td></tr><tr><td>자연생태 환경</td><td>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td></tr><tr><td>생활환경</td><td>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td></tr><tr><td>사회경제 환경</td><td>인구, 주거, 산업</td></tr></table>	평가분야	평가항목	대기환경	기상, 대기질, 악취	수환경	수질(지하수포함),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 환경	인구, 주거, 산업
평가분야	평가항목														
대기환경	기상, 대기질, 악취														
수환경	수질(지하수포함),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 환경	인구, 주거, 산업														
계획지원기능	<div>○ 스코핑, 평가서 초안에서 저감방안 의견수렴</div>														
정보공개	<div>○ 평가서 초안 및 본안(사업자 동의 얻은 사업)</div>														
주민참여	<div>○ 평가서 초안의 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의 의견 제시할 수 있음.</div>														
전문가 심의	<div>○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평가서를 전문적인 시점에서 검토하여, 협의기관에 검토의견 제시</div>														
환경부서의 역할	<div>○ KEI 등의 의견을 참조하여 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 작성</div> <div>○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 가능, 공사중지 요청 가능</div>														
승인부서의 역할	<div>○ 평가서를 협의기관에 협의 요청을 하며, 협의내용이 사업 계획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div> <div>○ 승인기관은 사업의 인허가시에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함(협의내용을 인허가 조건에 반영).</div>														





	○ 승인기관은 공사 및 운영 시에 협의내용이 잘 이행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음.
--	---

2) 전략환경영향평가

2013년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였고, 전략환경평가가 아닌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2조1항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2조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정책계획 14개, 개발기본계획 87개 총 101개 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참조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2, 개정 2013.3.23)(요약)

표 3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2, 개정 2013.3.23)(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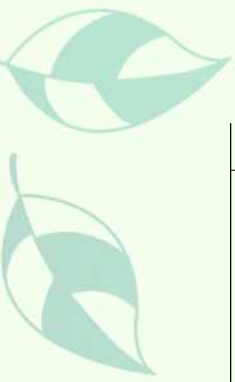
1. 정책계획

구 분	정책계획의 종류
가. 도시의 개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유통산업발전법)
나. 도로의 건설	도로정비 기본계획(도로법)
다.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라. 철도의 건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철도건설법)
마.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개발기본계획(관광진흥법) 권역별관광개발계획(관광진흥법) 온천발전종합계획(온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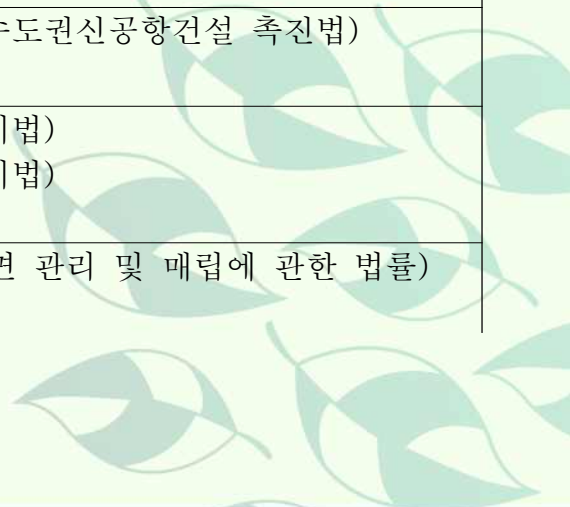
바. 산지의 개발	사방사업 기본계획(사방사업법) 산림기본계획(산림기본법)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촌진흥기본계획(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사. 특정지역의 개발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농어촌정비법)
아.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폐기물관리법)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가. 도시의 개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로 한정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구역의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도시개발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계획(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별 시행계획(유통산업발전법)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유통산업발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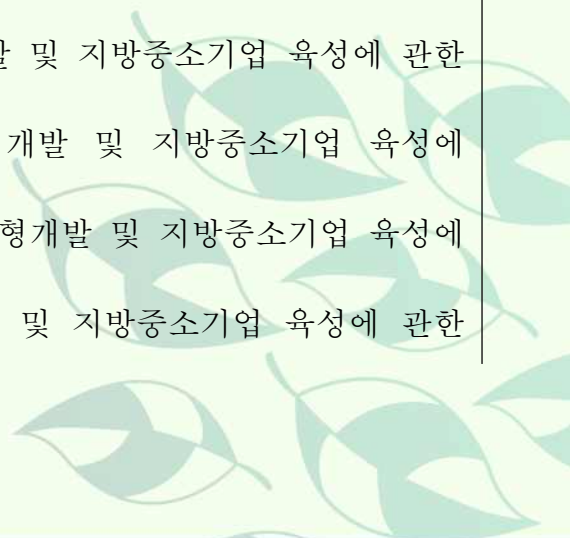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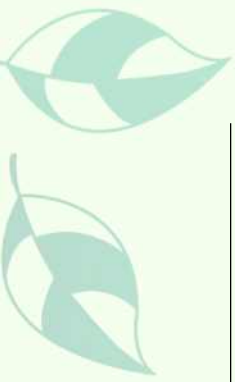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택지개발촉진법)
나. 산업입지 · 산업단지 조성	<p>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문화산업진흥 기본법)</p> <p>국가산업단지의 지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p> <p>일반산업단지의 지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p> <p>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p> <p>농공단지의 지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p> <p>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p> <p>유치지역의 지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p> <p>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 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외국인투자 촉진법)</p> <p>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획(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p>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전원개발촉진법)
라. 항만의 건설	<p>신항만건설기본계획(신항만건설촉진법)</p> <p>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신항만건설촉진법)</p> <p>어항의 지정(어촌 · 어항법)</p> <p>어항개발계획 중 어항시설기본계획(어촌 · 어항법)</p> <p>항만기본계획(항만법)</p> <p>항만재개발기본계획(항만법)</p> <p>항만재개발사업계획(항만법)</p>
마. 도로의 건설	<p>도로기본계획(농어촌도로 정비법)</p> <p>도로(고속국도는 제외)의 건설공사 계획(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바.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기본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사. 철도의 건설	<p>도시철도기본계획(도시철도법)</p> <p>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철도건설법)</p>
아. 공항의 건설	<p>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p> <p>공항개발기본계획(항공법)</p>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p>소하천정비종합계획(소하천정비법)</p> <p>소하천정비시행계획(소하천정비법)</p> <p>하천기본계획(하천법)</p>
차. 개간 · 공유수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매립	
카.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지등의 지정(관광진흥법)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온천법) 온천개발계획(온천법) 도립공원계획의 결정(자연공원법) 군립공원계획의 결정(자연공원법)
타. 산지의 개발	임업진흥계획(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촌개발사업계획(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묘지등의 수급 중·장기 계획(장사 등에 관한 법률)
파. 특정지역의 개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농어촌정비법) 생활환경정비계획(농어촌정비법)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농어촌정비법)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특구의 지정(농어촌정비법) 특구육성종합계획(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구관리계획(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및 사업계획(도서개발 촉진법)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석탄산업법)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 특별법)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 촉진 특별법) 개발계획(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광역개발사업계획(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지역의 지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지역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특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광역시설계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 포함)(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 체육시설의 설치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청소년활동 진흥법) 사업계획(25만제곱미터 미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거.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너.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보호구역등의 지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더.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공유수면에 지정할 때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골재채취법)

3) 국토교통부의 국토계획평가

국토교통부는 2005년 1월 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제495호, 2006년 건설교통부 훈령 제 2006-646 호로 개정)을 제정하여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19개 상위행정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여왔다. 2013년 국토기본법 제19조1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제도를 시행하여 기존의 전략환경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중장기 기본계획 29개(상위계획)를 대상으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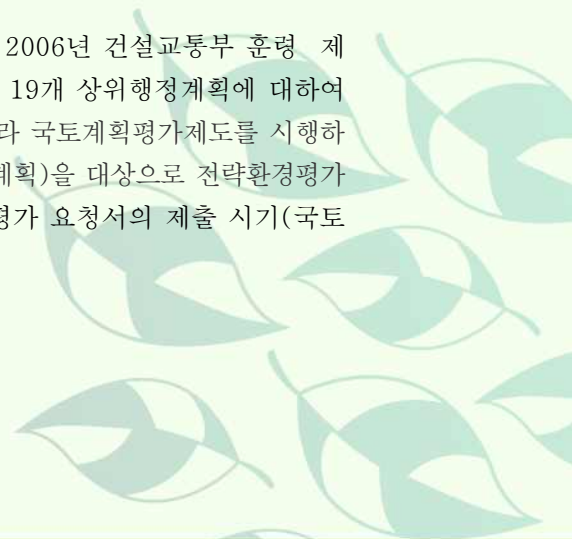


표 4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 관련)

구분	국토계획평가 대상
1. 종합계획 · 지역계획	<p>도종합계획(국토기본법)</p> <p>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p> <p>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도시 · 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광역개발사업계획(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p> <p>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p>
2. 기간시설계획	<p>국가기간교통망계획(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p> <p>광역교통기본계획(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p> <p>도로정비 기본계획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도로법)</p> <p>국가철도망구축계획(철도건설법)</p> <p>항만기본계획(항만법)</p> <p>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p> <p>항공정책기본계획(항공법)</p> <p>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항공법)</p> <p>국가물류기본계획(물류정책기본법)</p> <p>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p> <p>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p>
3. 부문별 계획	<p>주택종합계획 중 10년 단위의 계획(주택법)</p> <p>농어촌 정비 종합계획(농어촌정비법)</p> <p>산촌진흥기본계획(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p> <p>수자원장기종합계획(하천법)</p> <p>지하수관리기본계획(지하수법)</p> <p>산림기본계획(산림기본법)</p>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법)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법) 연안정비기본계획(연안관리법) 해양환경종합계획(해양환경관리법) 관광개발기본계획(관광진흥법)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4)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서로 중첩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 관광개발기본계획(관광진흥법)
- 광역개발사업계획(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철도건설법)
-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농어촌정비법)
- 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도로정비 기본계획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도로법)
- 산림기본계획(산림기본법)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촌진흥기본계획(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항만기본계획(항만법)

5)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가능성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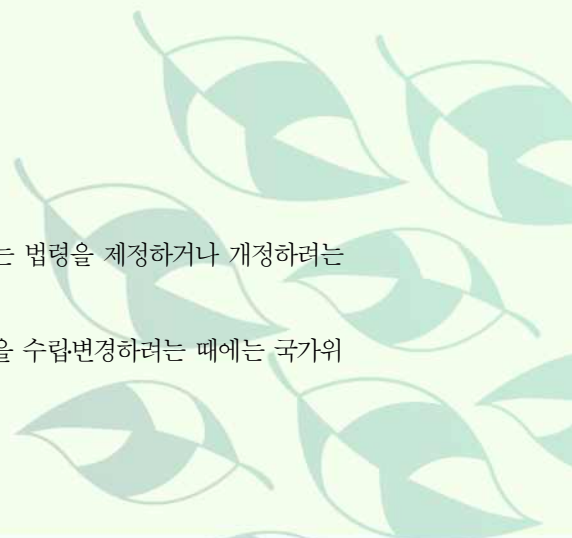
지속가능 발전기본법(2007년 제정)은 평가절차를 규정한 제도는 아니지만, 주요 상위행정계획에 대한 심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상위행정계획에서의 심의라는 의미에서, 개별부서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서 심의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현재는 기능하고 있지 않다. 지속가능성검토는 평가절차를 규정한 제도는 아니며, 주요 상위행정계획에 대한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속가능성검토는 SEA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장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1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



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16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7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6)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

기획재정부는 1999년부터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이전까지는,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대형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사업추진 이전에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지만, 각 부처 주관 하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유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사업계획수립을 동의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용역기관이 조사를 의뢰한 부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4~1998년 중에 완료된 타당성조사 33건 중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1999년도부터 도입하였다.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이전에 타사업과의 투자 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안 등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집중 검토하여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려는 것이다.

(2)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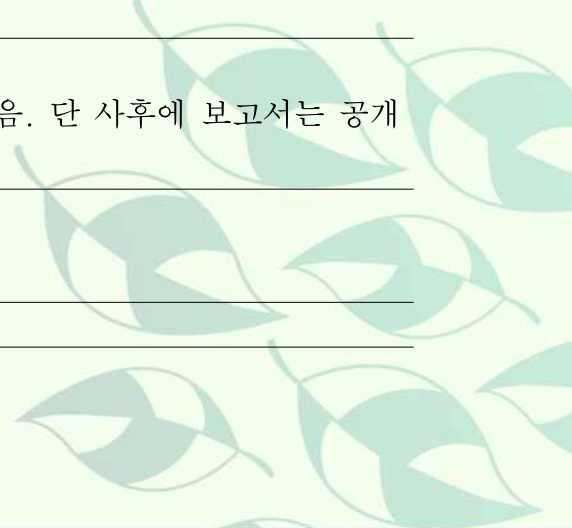
- 첫째,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 둘째,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차단하며,
- 셋째,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다.

목적	○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 평가를 의미함.
근거법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2006년 제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①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② 정보시스템 개발,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등 정보화 사업 ③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및 연구장비 구축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연구기반조성 사업
평가지기	○ 대규모사업의 예산편성 이전
평가주체	○ 기획재정부 주관,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공동투자관리




	센터(PIMAC)이 관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스크리닝은 존재① 대상사업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지역균형발전 요인, 상위계획과 부합성, 주무부처의 사업우선순위 등② 대상사업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함.- 주무부처의 사업설명회, 기획재정부 재정단 의견 수렴, KDI 공공투자관리 센터 의견수렴 등을 거침.○조사절차는 따로 규정되지 않음(즉, 절차법이 아님).
평가시점 및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제성 분석(수요의 추정, 기술적 검토, 편익의 추정, 비용의 추정, 비용편익분석, 민감도 분석, 재무성 분석)○정책적 분석(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평가항목, 자원조달 가능성, 환경성평가)○지역균형발전 분석(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종합평가 : AHP(다기준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 타당성 유무, 투자우선순위, 재정 분담방안 등 결정
계획지원기능	○특이사항 없음(단, 예산투입의 의사결정에 반영).
정보공개	○도중에는 정보공개 단계 없음. 단 사후에 보고서는 공개
주민참여	○없음
전문가 심의	○자문회의 개최





환경부서의 역할	○ 없음
승인부서의 역할	○ 의사결정에 반영
별칙규정	○ 없음
기타(운영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 국토계획평가와 지속가능성검토는 상위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인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계획부서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징이 있음.○ 대상사업의 선정에 있어 스크리닝을 의미하는 각종 기준이 존재하지만, 스크리닝 이후의 조사절차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절차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심의보다는 제3자 평가라 파악하는 것이 더 올바른 접근이라 판단됨.○ 정책적 분석 하에 환경성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거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만들어진 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지원기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3. 우리나라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

우리나라 SEIA(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계획프로세스와 준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계획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계획 수립 후 심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계획 프로세스에 맞추어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규정에 있어 시대와 공간에 따라 내용적 규제는 달라질 수 있으나 절차는 달라지지 않는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환경평가는 절차로 규정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법은 상위행정계획의 심의라는 점에서 독립적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제도이지만, 절차법(시스템)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SEA의 기본적인 요건에 미흡하다.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제도는 상위행정계획, 중장기 기본계획의 경우 계획절차와 연결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제도로 볼 수 있지만, 계획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어떻게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피드백이 가능하거나 부동의가 가능하다면 상위행정 계획 부분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제도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개별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별사업의 구상단계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단계가 아닌 예산의 투입 단계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예비타당성검토는 정보공개가 미약하고, 환경적 검토가 미약하여, 결과가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